

타워크레인 부정상납 등 건설현장 수사 본격화

‘월례비 강요’ 타워크레인 노조원 36명 입건...압색도 업무방해 등 민주노총 노조 불법행위 사실 관계 파악 중

광주경찰이 타워크레인 조종사 부정 급품 갈취 의혹 등 건설 현장 내 불법 행위와 관련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8일 오전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광주·전라지부·지회 사무실과 노조 간부 자택 등 11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타워크레인 노조 간부·조종원 등이 ‘월례비’ 명목

으로 부정 상납금을 챙기면서 건설사를 상대로 강요 또는 협박을 일삼았다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현재까지 조사 대상자 진술 등을 토대로 타워크레인 노조 간부 등 36명을 공동공갈·공동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월례비’는 공사 현장에서 건설사 측이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부정 급품을 뜻한다.

고소장을 낸 호남·제주 철근콘크리트 연합회(타설 공정 하도급 전문 건설사들)는 ‘노조 측의 강압적인 언행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도 따로 급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위험 작업 수행과 공사기간 단축 명목으로 서로 합의한 ‘성과급’ 또는 ‘상여금’ 개념의 돈이며 강요·협박 등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맞선다.

이와 관련해 연합회 측과 노조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다. 1심 재판에서는 노조 측이 승소했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광주경찰은 이 밖에 건설 현장 내 레미콘 차량 운행 거부 등 노조의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사실 관계 확인과 범의 검거를 거쳐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이미 1심에서 승소한 만큼, 시시비비는 가려질 것으로 본다”며 “건설사 측이 공기 단축 등을 위해 먼저 제안하는 경우도 현장에서는 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타워크레인 조종사 성과급 인상 여파가 있었지만 이 과정에 노조 측의 불법 행위는 없었다”면서 “차분히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해외연수 9건 중 8건 사전심사 규정 위반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한 해외연수 9건 중 8건이 공무원 국외연수 사전심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분석한 ‘시교육청 2020-2022년 국외연수’ 자료에 따르면 해외연수는 지난 2020년 7건, 지난해 2건이 추진됐다. 참석 인원은 2020년 58명, 지난해 5명으로 총 63명이다.

해외연수 내용은 ‘초등 광주형 영어심화연수’ ‘카자흐스탄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 현장답사’ ‘한중국 상호방문형 국제 교류 사업 방문’ ‘통일교육 발전을 위한 독일·체코 교육기관 방문’ ‘마이스터고 핵심 교원 및 관계관 국외 심화 연수’ ‘영재학교 교사 국외 심화 연수’ ‘청소년 해외봉사활동’ ‘SW마이스터고 교원 해외연수’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사전답사’ 등이다.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전남대는 현재 미국 주요 대학을 방문하고 있는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가 “공동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KNU10 사무국’ 설치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남대학교 제공

지스트 김기선 총장 임기 9일 남기고 불명에 퇴임

법원 조정따라 임기 3월5일→2월24일 해임 대신 자진 사임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김기선 총장이 법원의 조정에 따라 임기를 불과 9일 앞두고 퇴임한다.

지스트 이사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던 김 총장은 천신만고 끝에 해임 대신 사임을 하게 됐지만, 임기를 채우지 못한 불명에 오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지스트 이사회(이사장 한문희)는 김 총장이 지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청구’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가 제안한 조정 방식에 의해 종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재판부는 김 총장이 공식 임

기(4년) 종료일인 3월 5일보다 앞선 2월 24일자로 총장직에서 물러나게 조정결정을 내렸다.

김 총장은 그동안 센터장을 겸직하며 연구수당을 부당하게 청구고 전 직원 중간 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줬다며 노조로부터 총장직 사퇴를 요구받았고 이사회도 2021년 6월 총장 해임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김 총장은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재판부는 2022년 6월 ‘총장에 대한 이사회의 해임 결정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으며 김 총장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고 최근까

전남 설 성수기 대비 관광숙박업 안전점검 이달 말까지 불법 증개축·소방법 위반민·관 합동점검

전남도는 설 연휴를 전후해 관광 숙박시설 이용 증가로 발생 우려가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월 말까지 관광숙박업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호텔·콘도 366곳 중 10%인 36곳으로 시·군 관광부서, 민간 전문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추진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건축물 측대나 옥열 균열, 변형 등 건축물 안전상태’, ‘소화설비, 피난계단 등 소방법정 의무사항 준수 여부’, ‘관광숙박시설 불법 증·개축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이나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현장 조치하고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경우 조치 계획을 수립해 여름 휴가철 전까지 정비·보완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화재 등 중대한 위험 발생요인이 발견되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허가관청에 신고한다. 허가관청에선 재점검 후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하게 된다.

기아차 노조 전 간부 자택 압수수색

국정원 ‘간첩단 수사’

북한 간첩단 사건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이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 간부를 역임한 조합원 자택도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18일 경찰과 노동계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오전 경찰청과 합동으로 국가보안법 수사와 관련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본부 등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자 중에는 광주 기아자동차 노조 간부를 역임한 바 있는 A씨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등 방첩 당국은 전

남 소재 A씨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A씨는 민주노총 산하 신발노조 임원급직책도 맡은 바 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전국 각지에 결성된 북한 연계 지하조직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인 ‘차주통일 민중전위’가 민주노총에 침투한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자 이날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내용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 연계 혐의에 대한 내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고 밝혔다.

네팔 추락 여객기 탄 한국인, 장성父子

아버지는 ‘모범군민’

네팔 중부 포카라에서 발생한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 국내 탑승자 2명은 장성군에 거주하는 부자(父子)인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17일 장성군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현지시간) 오전 네팔 카트만두에서 포카라로 향하던 네팔 카스키 지구에서 추락한 네팔 에티항공 소속 여객기 내 한국인 탑승자 2명은 장성군민 유모(45) 씨와 아들(14)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부자는 방학을 맞아 지난 14일 히말라야 등반 여행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부사관인 유씨는 장성 소재 부대에 복무하고 있다. 특히 폭설 현장에서 조난객을 구한 공로 등으로 지난 연말에는 장성군수가 수여

하는 봉사 부문 ‘모범군민상’을 받기도 했다.

네팔 현지로 신속대응팀을 파견한 외교부는 소지품과 유류품을 통해 유씨와 아들 등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시신 2구를 확인하고 최종 신원 파악 절차에 나섰다. 시신 수습 이후 절차는 외교부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가 주관한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여객기에 타고 있던 승객 68명과 승무원 4명 중 68명은 승선 채 발견됐으나 4명은 실종 상태다.

장성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신원 확인 절차가 남아있다. 우선 아버지 유씨가 현역군인인 만큼 필요한 지원 여부는 군 당국과 협의·검토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돕겠다”라고 밝혔다.

광고문의 : 062-363-8800

신문광고 매체 모든 것

호남매일에 맡겨주십시오

전화 한통화로 광고효과를 확인하세요

공고광고	대리점모집 및 사원모집광고, 사무실 이전광고, 결산공고, 분실광고, 정부 및 관공서 광고 등
준공고광고	영업(PR)광고와 공고광고가 혼합된 광고
부동산광고	부동산 관련광고와 분양 영업광고 일반적 상품광고, 기업PR 광고, 세일광고 등
정치 및 긴급성 광고	성명서, 호소문, 해명서 등 긴급을 요하는 광고와 정치단체(정당)에서 하는 정치광고
안내광고	구인, 구직, 부동산 임대나 매입, 중고품 판매, 결혼상담 등 각종 생활정보 광고

광고접수 : 062-363-8800 FAX:062-362-0078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 이메일:honamnews@hanmail.net